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국 소수자 정신 보건 인식의 달을 맞아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질병에 대해 보험사가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신규 규제 추진

*공평 준수 프로그램 규제 제안안은 보험사의 '주정부 및 연방법에 따른 의무' 강화*

*준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부적절한 관행을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서면 정책, 절차 및 방법론이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전국 소수자 정신 보건 인식의 달(National Minority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을 맞아 오늘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질병에 대해 보험사가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신규 규제를 추진합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제안한 공평 준수 프로그램 규제에 따라 정신 보건 및 약물 남용 질병 치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 및 연방법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19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동료 뉴욕 주민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보험사에 필요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전례 없는 시기에 비판적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 제안안은 보험사가 법에 규정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질병에 대한 공평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기를 요구함으로써 정신 건강의 문제 또는 약물 문제를 겪는 수많은 뉴욕 주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보건, 경제 및 시민권 등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금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 치료 및 약물 남용 질병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뉴욕 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 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보건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뉴욕 주민들이 건강 보험 보장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보건 단체(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와 같이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공인된 보건 플랜과 동일한 규제를 제안하여, 이러한 플랜의 보장을 받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에 대한 접근성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뉴욕은 공정을 위한 싸움에서 길을 이끄는 존재로서 개인과 그 가족이 약물 남용 질병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 및 연방 공정법에 따른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공중 보건 시스템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의무를 준수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이번 규제 제안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필수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섭식 장애에 대한 공평한 보장은 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러한 보장 범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극단적인 행정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하기에 너무 비싼 서비스 요금을 책정하여 계속 이러한 법규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 왔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수천 달러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이들이 보험 플랜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많은 사람이 정신 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팬데믹 기간에 뉴욕주가 양질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보험사가 실제로 이러한 치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식 장애는 뉴욕 전역의 가족이 피해를 입히는 실제적이고 복잡하며 파괴적인 문제입니다. 섭식 장애 및 기타 많은 정신 질환은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 가능성이 높고, 뉴욕 주민은 과산과 회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법안을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로운 규제가 가족들이 필요한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걸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섭식 장애 연합(National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NEDA)의 Claire Mysko**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EDA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가 보험사들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질환에 대한 공평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제안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섭식 장애 및 기타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접근법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은 섭식 장애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커뮤니티에는 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섭식 장애 및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Nily Rozic 하원의원, Linda Lacewell 청장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규제 제안안에 따라, 공평 준수 프로그램은 공평 준수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정신 건강 상태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서비스 보장 범위의 불일치를 확인하며, 부적절한 관행을 적절하게 확인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규제 제안안에 따라 보험사는 다음을 실시할 숙련된 인력을 적절하게 임명해야 합니다.

- 공평 준수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보험사의 최고 경영자 또는 기타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 준수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해 보험사의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 또는 해당 위원회에 최소 연간 보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보험사의 공평 준수가 어떻게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되는지 설명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
- 부적절한 관행의 확인 및 수정을 위한 방법.
- 재무 요구 사항 및 양적 처리 제한 분석을 위한 보험 계수법 인증 절차.
- 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
- 직원 및 관리자가 공평 준수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대책.
- 준수 프로그램에 선의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 협박성 및 비 보복성 정책.

발견 후 6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하는 금지 대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보장 혜택과 의료 또는 외과적 보장 혜택에 대한 문서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부당이득 환수처분 정책.
- 확정된 임상 또는 품질 트리거가 없는 경우, 정신 건강 또는 약물 건강 질환의 보장 혜택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사전 승인, 동시 또는 소급 실시 의무화.
- 의학적 또는 외과적 보장에 대한 환급률 적용 방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또는 더욱 엄격하게 정신 보건 또는 약물 남용 질환 보장 혜택에 대한 환급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 실시.
-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질환에 대한 보장 혜택보다 입원 환자 의료 또는 외과적 치료에 대한 보장 혜택 청구를 자동 판결을 통해 더 높은 비율로 승인하는 청구 변경 또는 시스템 구성.

규제 제안안의 전체 사본은 DF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견은 2020년 9월 7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